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18
VOL.27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제현정, 설송이, 박진우, 이희성,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Contents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요약

I. 미국발 보호무역조치,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제현정)	1
II.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이다 (박진우)	8
III. 자유무역협정 추진, 미국형 무역협정의 반란 (설송이, 곽동철)	17
IV.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 개혁의 향방은? (이희성)	28
V. 결론 및 향후 과제	32

제현정 차장(02-6000-5477, hjje76@kita.net)

설송이 차장(02-6000-5601, snowsong@kita.net)

박진우 과장(02-6000-5609, jinwoo84@kita.net)

이희성 과장(02-6000-8383, leeheesung@kita.net)

곽동철 연구원(02-6000-5604, kwakie@kita.net)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2019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로 전환하고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하여 단기 대응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통상환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갈등은 당분간 휴전 국면에 들어갔지만 양국간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미중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이 앞으로 추진될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PTPP 협정이 금년 12월말 발효되고 RCEP이 내년에 타결될 경우 메가 FTA가 통상환경에 미칠 반향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와 분쟁해결을 위한 상소기구 개편 방안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단기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신규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발생시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지속시키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관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중국내 또는 중국과 연계하여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와 시장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추진될 신규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통상대응 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단기 대응방안	중장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치 수시 모니터링 ◆ 계약체결시 리스크 부담 조건 반영 ◆ 철저한 바이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통상분쟁 리스크 관리 ◆ 수출시장 다변화 ◆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I. 미국발 보호무역조치,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 2018년 동향

1. 2018년 미국의 對세계 수입규제조치

(1)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 현재 미국의 對세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총 462건으로 반덤핑 351건, 상계관세 111건을 부과 중

○ 국별로는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은 170건을 부과 중이며, 그 다음으로 인도(41건), 한국(33건), 대만(27건) 순서임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어 237건이 부과 중이며, 그 다음으로 화학·의약품(56건), 농산물(30건), 금속·광물(27건) 순서임

<미국의 국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현황>

국가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일본	터키	브라질	인니	멕시코	베트남	전세계
반덤핑	119	23	26	26	18	9	11	10	13	10	351
상계관세	51	18	7	1	0	8	4	5	1	3	111
합계	170	41	33	27	18	17	15	15	14	13	462

주 : 2018.10.22 기준

자료 : USITC

<미국의 품목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현황>

품목	철강	화학, 의약품	농산물	금속, 광물	플라스틱, 고무	섬유	기계, 전기	기타
반덤핑/상계관세	237	56	30	27	25	5	3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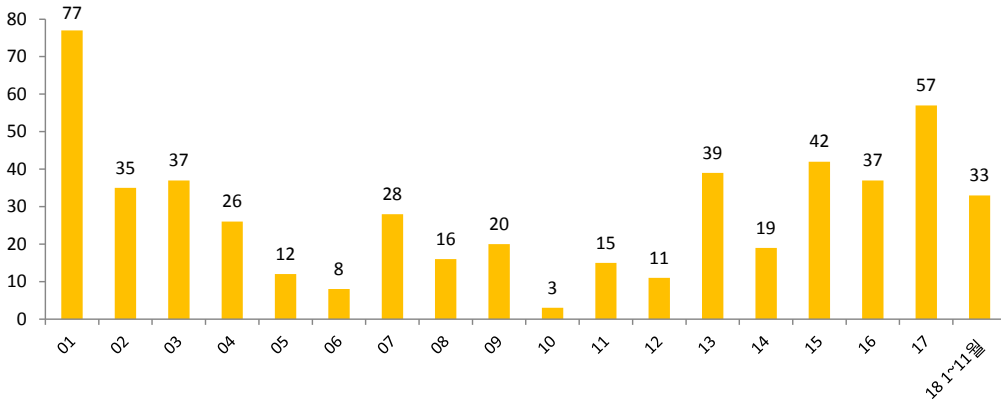
주 : 2018.10.22 기준

자료 : USITC

□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 1~11월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33건을 기록

- 국별로는 중국(14건), 인도(3건), 태국(3건) 등이며,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대구경광관 1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미국의 연도별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건수)>



자료 : 미국 상무부

(2) 세이프가드 조치

□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2018.2.7) 이후 미국의 동 품목에 대한 수입이 크게 감소

- 금년 1~9월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인 말레이시아(-31.5%), 멕시코(-22.4%), 한국(-32.1%)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 동 기간 미국의 對세계 세탁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하였으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44.4%,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3.1% 감소

<미국의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태양광 셀·모듈				세탁기		
	2017	2018(1~9)	증가율		2017	2018(1~9)	증가율
말레이시아	1,567	738	-31.5	베트남	620	237	-44.4
멕시코	828	469	-22.4	태국	463	210	-14.2
한국	1,093	468	-32.1	멕시코	160	122	0.8
중국	929	365	-9.3	한국	244	104	-23.1
베트남	837	336	-18.5	중국	22	63	292.9
전 세계	7,002	3,613	-15.7	전 세계	1,608	810	-20.1

주 : 세탁기는 HS 8450.20, 태양광 셀 및 모듈은 8541.40.60, 8501.31.80, 8501.61.00, 8507.20.80 기준
 자료 : USITC

(3)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한국의 對美 철강제품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

* 한미 양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물량의 70%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데 합의

○ 판매료가 포함되어 있는 HS 72류의 수출은 2015~2017년간 對美 수출이 감소세를 시현하여 3년 평균 쿼터 설정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소폭 증가

○ 쿼터 물량이 2015~2017년간 3년 평균 50%로 설정된 강관류가 포함되어 있는 HS 73류의 2018년 1~10월간 對美 수출물량은 46.2% 감소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물량>

(단위 : 만 톤, 전년 동기 대비 %)

	HS 72류				HS 73류		
	2017	2018(1~10)	증가율		2017	2018(1~10)	증가율
총계	2,872	2,412	0.1	총계	544	358	-22.2
중국	412	329	-4.0	미국	235	107	-46.2
일본	395	299	-8.8	일본	49	42	1.0
인도	279	262	10.6	중국	32	25	-5.0
멕시코	187	174	7.4	캐나다	13	19	91.4
베트남	192	152	-4.5	UAE	13	17	44.5
태국	175	152	4.3	베트남	20	13	-12.9
미국	149	133	4.4	멕시코	9	9	19.2
아세안	624	505	-2.7	아세안	61	42	-18.1
EU	322	308	14.4	EU	33	27	-3.5

주 : HS 72, 73류 중 일부 품목은 232조 조치에서 제외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2. 보호무역조치 확산

(1)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 미국뿐 아니라 인도, 중국, 캐나다 등도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임

-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도는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2016년 69건, 2017년 49건으로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
- 미국, 인도에 비해 반덤핑 조사가 활발하지 않던 중국도 2017년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24건에 달함
- 캐나다도 2012년부터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건을 기록

<국별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3	15	11	39	19	42	37	54
인도	41	19	21	29	38	30	69	49
중국	8	5	9	11	7	11	5	24
호주	7	18	12	20	22	10	17	16
캐나다	2	2	11	17	13	3	14	14
EU	15	17	13	4	14	11	14	9

자료 : WTO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

<국별 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3	9	5	19	18	23	16	24
캐나다	1	2	6	4	12	3	2	11
전 세계	9	25	23	33	45	31	34	41

자료 : WTO

(2) 세이프가드 조치

-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이후 EU, 터키, 캐나다, EAEU(Eurasian Economic Union)도 철강제품 수입 급증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 (EU) 미국이 232조 조치를 시행한 직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3.26)하고 7월 19일부터 200일간 23개 철강 품목군에 대해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 할당)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

- 글로벌 쿼터 방식으로 품목군별 지난 3년간 수입된 평균물량에 대하여는 무세를 적용하고 초과된 수입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 (터키) 4월 27일에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10월 17일에 글로벌 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
- (캐나다) 10월 25일부터 7개 철강제품군에 대해 글로벌 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
 - 전체 잠정조치 기간은 200일이며 동 기간을 50일씩 나누어 각 50일마다 쿼터량을 설정하고,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 쿼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별 비율을 설정

<캐나다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및 쿼터>

품목분류	50일 쿼터량 (톤)	총 200일 쿼터량 (톤)	1국당 쿼터 내 비율 상한
Heavy Plate	12,918	51,672	23%
Concrete Reinforcing Bar	35,332	141,328	23%
Energy tubular products	64,348	257,392	23%
Hot-rolled sheet	15,299	61,196	37%
Pre-painted Steel	11,635	46,540	35%
Stainless Steel Wire	467	1,868	25%
Wire Rod	11,513	46,052	47%

자료 :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 (EAEU)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인 EAEU는 8월 7일에 HS 72류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2 2019년 전망

1.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1) 무역규제조치

□ (반덤핑·상계관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 (AFA:Adverse Fact Available)와 특정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항의 적용을 통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부과하는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는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을 철강제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품목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세이프가드)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는 세탁기의 경우 2019년에 중간 점검(monitring) 절차를 밟게 되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이 조치를 감소, 수정, 또는 종료시킬 수 있음
 -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세이프가드 규정(201~204조)에 따라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조치 기간의 중간시점까지 점검한 결과와 조치의 완화, 수정 또는 종료를 건의할 수 있음
 - 중간 점검시에도 USITC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조치 종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피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미국 세이프가드 규정 중 중간 점검 관련 조항>

Section 204. Monitoring,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Action

(a) Monitoring. -

- (1) So long as any action taken under section 203 remains in effect, the Commission shall monitor developments with respect to the domestic industry, including the progress and specific efforts made by workers and firms in the domestic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 (2) If the initial period during which the action taken under section 203 is in effect exceeds 3 years, or if an extension of such action exceeds 3 years, the Commiss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under paragraph (1) to the President and to the Congress not later than the date that is the mid-point of the initial period, and of each such extension, during which the action is in effect

(2)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 (철강)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미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 변동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국과 쿼터 부과국별 영향이 상이해질 것으로 전망
 - 지난 8월 철강제품 232조 조치로 쿼터를 부과한 국가들(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품목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명령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신청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및 부품) 내년 초까지 상무부의 조사결과 보고가 예정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對美 자동차 수출국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은 부속서한 형태로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일정량의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232조 조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232조 관련 부속서한은 USMCA 발효와 상관없이 미-캐나다, 미-멕시코간 서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날에 발효됨
- 또한 최근 GM社가 북미지역 7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의 시행시기와 수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2. 보호무역주의 확산

- 당분간 주요 국가의 무역구제조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아세안 등 신흥개도국으로 수출이 집중될 경우 동 지역의 보호무역조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터키,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흥개도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최근 자국의 무역구제제도 정비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음
-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지속되는 한 EU, 터키, 캐나다 등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미국이 232조 적용대상에서 캐나다를 면제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USMCA 공식 서명(11.30)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232조 조치 면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II.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이다

1 2018년 동향

□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美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조사를 지시한 후 美 무역대표부(USTR)는 금년 3월에 조사 결과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

○ 보고서는 정부의 부당한 산업 기술 이전 행위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사 근거를 제시

- * (1)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및 지재권 이전을 위해 美기업에 대한 각종 압력 행사
- (2) 중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시장 기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음
- (3) 신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시하고 부당하게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개입
- (4)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 데이터망에 무단 침입을 지시하거나 지원

□ 중국 국무원은 9월 24일 '미·중 무역마찰 현황 및 중국 입장' 명의의 백서를 발간

○ 백서는 총 6개 부분(3.6만자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중 경제·무역 협력의 상호이익, 미·중 경제 무역 관계의 사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포함

-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정책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유일한 방법으로 중국의 일관된 협력 추구 입장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

□ 미·중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 관세를 발효한 상황

○ (1차 조치)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품목(545개)**에 대해 25% 관세 부과(7.6)

* 미국의 주요 제재품목: 원자로,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기·항공기부품, 카메라, 의료기기 등

** 중국의 주요 제재품목: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 (2차 조치)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279개 품목,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333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 부과(8.23)

* 미국의 주요 제재품목: 반도체, 전자담배, TV 리모컨, 전기 스쿠터 등

** 중국의 주요 제재품목: 화학, 에너지, 의료제품, 트랙터,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 (3차 조치) 미국은 약 1,9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10%(2019년 이후 25%)의 보복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은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207개에 대해 5~10% 보복관세를 부과(9.24)

* 미국의 주요 제재품목: 냉장고, 건조기, 엔진 부분품, 벤젠, 타이어 등

** 중국의 주요 제재품목: 쇠고기, 연어, IP 전화 신호 변환기, 티타늄제품, 섬유 제품 등

□ 미국은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12.1) 개최 이전부터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임

- USTR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美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8개월만(11.20)에 업데이트함

- 이번 보고서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이전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피해 사례에 집중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EU, 한국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도 수록

* 한국의 폴더블 OLED 기술 및 풍력터빈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탈취 문제를 언급

□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

- (보복관세 인상 유예) 미국은 당초 2019년 1월 1일부터 대중 수입 2천억 달러에 대한 보복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9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

-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금액은 미정)하기로 합의.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즉시 시행키로 함

- (미·중 무역구조 변화를 위한 협상)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90일간 협상하기로 합의

- 합의도출 실패시 미국은 대중국 수입 2천억 달러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 예정

- (퀄컴의 NXP 인수 승인 검토) 시진핑 주석은 과거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미국 퀄컴의 NXP(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안을 재신청할 경우 승인할 수 있음을 언급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대해서는 양국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미·중 무역전쟁 중 미국의 최대 피해 품목 중 하나였던 미국산 대두 수입이 곧바로 재개되고, 향후 천연가스 등 미국 자원 분야의 대중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 *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 물량의 62%를 수입하며, 미·중 갈등 여파로 현재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량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상황(Bloomberg)
- 미·중 통상분쟁의 핵심 의제인 중국의 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최근 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휴전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미·중 통상분쟁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 중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3분기 6.5%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최근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소비*와 투자** 모두 감소 중
 - *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7년 동안 7~8%대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8월 5.3%까지 감소
 - ** 소매판매 증가율도 2017년 10~11%대에서 2018년 9월 9.2%까지 하락
- 미국 역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현 시점이 대중국 협상력의 최고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음
 -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미국의 주택* 및 자동차** 판매가 감소세는 미국의 경제 둔화 신호라고 보도
 - * 최근 미국의 주택 판매는 올해 3~9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에는 522만 채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5.1% 감소
 - ** 미국 자동차 판매가 100만대 감소함에 따라 최근 GM은 내년에 미국 내 4곳, 미국 외 3곳의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1만 4,800명 감원을 발표
- 미·중 합의 불발로 내년 상반기 미국이 대중 수입관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소비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해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2019년 전망

- G20 정상회담 결과로 임시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이 본질적으로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올해 미중 통상분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중간 기술분쟁이 2차전에 돌입, 첨단산업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을 겨냥한 ‘미래 기술 수출 규제’시행을 검토 중이었으며,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개별 제재도 준비 중
 - 美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AI,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의건 수렴(12.19 限) 후 新리스트를 발표할 계획
 - 반면 중국은 중저속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첨단 산업 기술 굴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중국 제조 2025]

- 첨단기술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하드웨어) 분야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
-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독일 및 일본 수준의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으로 2045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발전 전략을 구상

<중국 제조 2025 단계별 전략>

단계	목표	발전전략
1단계 (2015~2025년)	세계 제조업 제2그룹 대열 진입	제조업의 IT 경쟁력 제고, IT와 제조업의 융합 강화
2단계 (2025~2035년)	세계 제조업 제2그룹 선두 선점	중국 우위산업의 국제시장 주도권 확보
3단계 (2035~2045년)	세계 제조업 제1그룹 진입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강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도

* 세계 제조업을 3그룹으로 분류: (제1그룹) 미국 (제2그룹) 독일, 일본 (제3그룹)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
 자료 : 중국 국무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1차 격전지는 반도체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간의 기술분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향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기대되는 산업임

-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중국의 기술 성장이 가장 크게 충돌할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라고 전망

○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2014년 1조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반도체 디자인, 포장, 테스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하이실리콘(HiSilicon, 海思), 칭화유니(紫光) 등 중국 핵심 반도체 업체들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전 세계 칩 디자인 기업 순위에서 각각 6위와 10위에 등극. 창토펬지(长电科技), NFME(通富微电), 텐수이화톈(天水华天) 등은 반도체 포장 및 테스트 분야에서 각각 3, 6, 8위로 순위가 상승함 (출처: 바이비뉴스, 2018.7)

○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은 제조 분야로 미국은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의 공급을 차단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를 압박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반도체 생산이 최첨단화되면서, 보다 세밀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 전세계 반도체 제조 기업은 미국 기업(AMAT, LAM Research 등)이 생산하는 제조장비가 필요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제한될 경우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기업에게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사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업(푸젠진화반도체) 견제

○ 미국은 푸젠진화 칩 생산 능력이 미국 군사 시스템용 반도체 공급업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장비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 상무부 수출입금지 명단에 푸젠진화를 포함(10.29)

○ 미국 연방대배심은 중국 푸젠진화와 대만 UMC가 미국 마이크론의 영업 기밀을 도용 탈취한 혐의로 기소(11.1)하였으며, 미국 법무부는 탈취한 기술 사용 혹은 이전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도 제기

○ 미국의 수출 금지 명령 발표 후 푸젠진화와 기술 제휴 중인 대만의 UMC 반도체 기업은 푸젠진화와와의 협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함(10.31)

□ 양국은 과거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무역전쟁을 지속한 전례가 있는 만큼 양국의 추후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

- 지난 5월 19일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

<美 백악관 발표 : 미·중 무역분쟁 공동성명(2018.5.19) 주요 내용>

- 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한 조치에 동의
- ② 미국의 대중국 농산품과 에너지 수출 확대에 동의
- ③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 확대에 동의
- ④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에 동의
- ⑤ 상호투자(two-way investment) 관련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 그러나 양국의 무역분쟁 합의 10일 만에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Unfair Trade Policy)을 비판하며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제재 조치를 이어감

<백악관 성명서(2018.5.29)의 일부>

(Statement on Steps to Protect Domestic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ina's Discriminatory and Burdensome Trade Practices)

- ① 자국 안보를 위해 중국의 미국 산업 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6월 30일에 발표될 예정
- ②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3.23)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임
- ③ 美통상법 301조에 따라 미국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품목의 수입(500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최종 품목 목록 6월 15일 발표)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향후 2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통상제재를 지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을 변화시킬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대통령 재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 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3분기 6.5%에서 2019년 3분기 6.1%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전망*

* 블룸버그의 주요 금융기관 전망치 취합 자료(10.5~23)

- IMF는 미국이 전체 대중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19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0.9%,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10.9)

- 미·중 통상분쟁으로 수출은 2018년 3분기 9.1%에서 2019년 3분기 4.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동기간 수입도 15.6%에서 5.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Bloomberg)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의 중국 경제전망>

구분	확정치				전망치					
	'17 Q4	'18 Q1	'18 Q2	'18 Q3	'18 Q4	'19 Q1	'19 Q2	'19 Q3	'19 Q4	'20 Q1
GDP(YoY%)	6.8	6.8	6.7	6.5	6.4	6.3	6.2	6.1	6.2	-
고정자산 투자(YoY%)	7.2	7.5	6.0	5.4	6.5	6.4	6.1	6.3	6.0	6.5
산업생산(YoY%)	6.2	6.0	6.6	6.0	6.2	6.1	6.0	6.0	5.7	5.8
소매 판매(YoY%)	-	-	9.4	9.5	9.5	9.8	9.4	9.1	9.3	9.1
수출(YoY%)	-	-	11.5	9.1	6.4	4.8	3.9	4.5	5.5	4.0
수입(YoY%)	-	-	20.0	15.6	12.0	6.0	6.2	5.8	6.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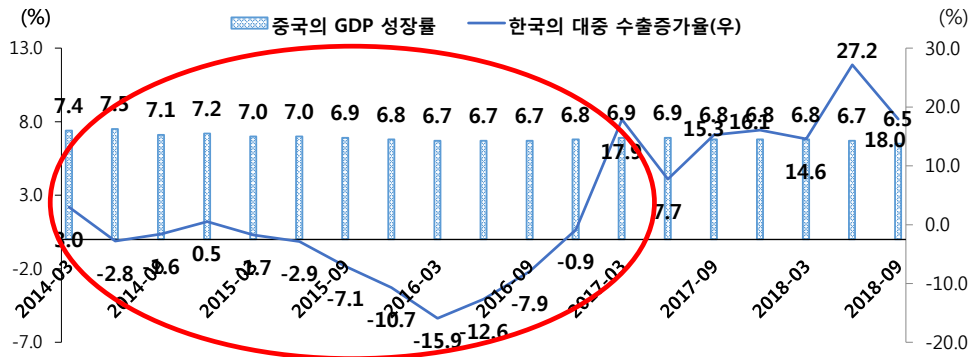
주 : 전망치는 주요 금융 기관의 중간 값 사용

자료 : Bloomberg

□ 다만 중국 경기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향후 중국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4~2016년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대중 수출도 급격히 감소했으며, 2016년말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증가하는 등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대중 수출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대중 수출 추이 비교>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CEIC

□ 중국 정부는 최근의 경제 흐름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여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한 시장 활력 유지에 힘쓸 것으로 예상됨

○ 9월 13일 중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모든 국유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율을 2017년말 기준 2%p*씩 낮출 것을 지시하며 부채비율 관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유기업 부채율 2017년말 65.7% → 2020년말 63.7% 목표

○ 중국 정부는 자국 수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장기간 어려워질 경우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은 제3국에서 중국 제품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내수 소비 감소와 함께 미·중 통상관계 악화로 대외 수출 여건이 더욱 나빠질 경우 아직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는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 생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무역분쟁이 임시 휴전에 들어갔으나,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은 향후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할 필요
 -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협상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은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즉시 올릴 예정이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대중 수입 품목 2,670억 달러에 대하여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음
 - 미·중 통상 분쟁이 악화될 경우 추가 보복 관세 품목에 대한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피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 생산체제와 대미 수출 경로에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III. 자유무역협정 추진, 미국형 무역협정의 반란

1 2018년 동향

1. 주요 FTA 추진 동향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현황)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서명(11.30)

○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에 USMCA 서명 전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이 자동차·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를 가정해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제외와 관련 원산지 규정을 부속서한 형태로 합의

○ 미국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일정 물량의 승용차(멕시코, 캐나다 각 260만대)와 일정 금액의 자동차 부품(멕시코 1,080억 달러, 캐나다 324억 달러), 그리고 경량트럭(light truck)은 232조 조치에서 제외

○ 232조 조치가 면제되는 물량의 경우, USMCA 원산지 충족시 관세 0%, 원산지규정 미충족시 미국의 MFN 실행관세율(2.5%, 2018. 8. 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USMCA 발효 이전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NAFTA 원산지규정(북미산 부품 비중 62.5% 이상) 충족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

○ 232조 조치 부속서한은 USMCA 협정 발효와 별개로 적용되도록 합의

<멕시코-미국간 232조 관련 부속서한>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of confirmation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letter in reply.

* 캐나다-미국간 232조 관련 부속서한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됨

<자동차 232조 미적용/적용에 따른 관세 부과>

USMCA* 원산지규정	232조 미적용			232조 적용			
	승용차	부품	트럭	승용차		부품	
충족	0%	0%	0%	[면제한도] 멕시코, 캐나다 260만대	0%	[면제한도] 멕시코 1,080억\$, 캐나다 324억\$	0%
미충족	2.5%	2.5%**	25%		2.5%		2.5%**
			[면제한도 초과시] 232조 추가관세 부과				

* USMCA 발효 이전 232조 조치시 NAFTA 원산지 규정으로 대체

** 자동차 부품 중 대표적인 관세율을 표기한 것임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 (현황)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서명(3.8)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빠른 금년 말(12.30) 발효

○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발효 요건을 갖췄으며, 나머지 4개국도 국내 비준을 가속화할 전망

○ 발효(12.30) 직후인 2019년 1월 1일에 이행 2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어 관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은 이행 2년차부터 매년 관세 인하시 해당 연도의 4월 1일부터 효력 발생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현황) 2013년 5월 개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올해 큰 진전을 보였으며 내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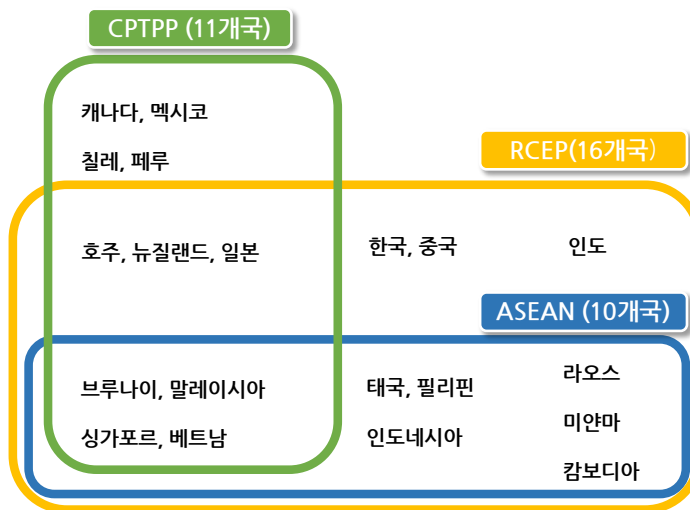
*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49%, 세계 GDP의 32%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

□ (주요내용) 전체 20개 챕터 중 7개 챕터(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에서 합의가 이루어짐

○ (상품) 공통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既체결된 양자 FTA보다 더 큰 폭으로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既체결된 양자 FTA 대비 추가적인 서비스 분야의 개방 기대
 - * 양허안에 명시된 분야만을 개방하며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개방할 의무 없음
 - (투자) 투자 유보안을 교환하고 유보수준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원산지) 기존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논의 지속 중
- RCEP이 타결되면 신남방정책의 핵심 거점국가인 아세안, 인도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가 다변화되고 원산지 규범이 통일되어 우리 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4) 브렉시트(Brexit)

- (현황) 2년여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 끝에 EU 긴급정상회의(11.25)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브렉시트 협정)이 공식 승인되어 양측 의회가 비준절차에 착수할 예정
- EU 정상들은 긴급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이 담긴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 등에 대한 윤곽이 담긴 '미래관계 선언'에 서명
 - 영국과 EU의 향후 통상관계에 대한 논의는 브렉시트 발효일 이후 2020년 말까지 이어지는 전환기간 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주요내용) 탈퇴협정에는 브렉시트 발효일(2019.3.29) 이후의 전환기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분담금 정산, 거주민 권리,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한 합의,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

○ (전환기간) 브렉시트 발효일 이후 21개월의 전환기간을 설정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2월까지 EU 단일시장 잔류

- 단,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합의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안전장치(backstop)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

* 현재 사실상 국경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행과 통관절차가 엄격히 집행되어 국경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

- EU는 하드 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로 북아일랜드만이라도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시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상품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EU가 제시한 안전장치(back-stop)>



자료: 저자 작성

- 영국은 북아일랜드만을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은 한 국가인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사실상 국경선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 결국 양국은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합의

<영국과 EU가 탈퇴협정에서 합의한 안전장치(back-stop)>



자료 : 저자 작성

- (분담금)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3,000억원)를 납부
- (거주민 권리)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이 누리던 노동, 교육, 거주, 권리를 기존과 같이 인정
- (미래 관계) 향후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무역협정 체결 추진
- (금융서비스) EU가 영국의 금융 관련 규제가 EU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영국 금융기업의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

(5) 일본-EU 경제연대협정(EPA)

- (현황) 일본-EU간 자유무역협정인 일본-EU 경제연대협정(EPA)에 양측 정상이 서명(7.17)했으며, 내년 초 협정 발효를 목표로 금년 말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데 양측이 합의
- 일본, EU는 각각 내년 초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어 양측은 EPA 발효가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한국의 FTA 추진 동향

(1) 한미 FTA 개정

- (현황)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안에 공식 서명(9.24)하였으며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12.7)하고 내년 초 발효 예정
- (국내절차)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미국은 의회승인 없이 협상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 종료

- (발효절차)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 제출(10.12),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 의결(11.29)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을 완료함(12.7)

-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 발효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발효 예정

□ (주요내용) 미국은 자동차, 한미FTA 이행이슈 등을, 한국은 ISDS, 무역구제 등을 핵심 관심분야로 설정하고 협상범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개정협상을 타결시킴

- (ISDS 남소 제한) 다른 투자 협정과 중복하여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 투자분쟁해결제도 (ISDS)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남소 가능성 제한
-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현지실사 절차규정을 도입하고 미국 정부의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도록 합의하여 절차적 투명성 제고
- (픽업트럭 관세)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
- (자동차 안전기준) 미국 현지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시 제작사별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자동차 환경기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2016~2020년)하고, 차기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금년 말까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합의

(2) 신규 FTA 및 FTA 업그레이드 추진

□ (한-메르코수르 TA) 남미 최대의 경제권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개시(9.11~15)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현재 회원자격이 무기한 정지된 상태

**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메르코수르측은 FTA보다 TA라는 용어를 선호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TA 체결시 양측간 투자·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한-메르코수르 TA가 체결되면 미주지역 대부분과의 FTA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사드 갈등으로 협상 개시가 불투명했으나 한중 정상회담(2017.12.14)을 계기로 협상 개시에 합의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 협상(3.22~23, 7.11~13)이 이루어짐
- 네거티브(negative)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가능
 - 협상 개시 2년 내에 타결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을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 가능
 -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와 규제 투명성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무역과 투자 증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의 현대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11.28~30)을 개최
- 한국은 냉장고·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접근 개선,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등을 추가하고 노동, 환경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포함시키고자 하며 칠레는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2016년 개시 이후 금년까지 6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함
-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① 한국은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물가공품 등을, 인도는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 개방 ②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③ 일부 품목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 완화 등임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협상) 2016년부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임

2 2019년 전망

1. 한국의 FTA

□ 중미 5개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총 57개국과 16건의 FTA가 발효될 전망

○ (한미 FTA 개정) 한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12.7)되어 내년 초 발효 예정

○ (신규 FTA) 한-메르코수르 협상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협상 등이 추진될 전망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 간 경제공동체

- (태평양 동맹) 한국은 금년 7월 태평양 동맹 준회원 후보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장관급 협의체를 우선 구성해 정식 회원국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既체결했으며 한국이 태평양 동맹에 가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멕시코와 양자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FTA) 신남방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중 협상이 개시될 예정

○ (FTA 업그레이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9년 말 타결을 목표로 후속협상이 진행되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개선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RCEP) CPTPP가 발효됨에 따라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다른 축인 RCEP이 내년 중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2019년 FTA 추진 전망>

발효(16건, 57개국)		협상중		검토중	
既발효 (15건, 52개국)	신규발효 (1건, 5개국)	신규	개선	협상재개 여건조성	여건검토· 공동연구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MERCOSUR 한중일, RCEP(16), 에콰도르, 이스라엘	아세안, 인도, 칠레,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멕시코, GCC	EAEU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2. 외국의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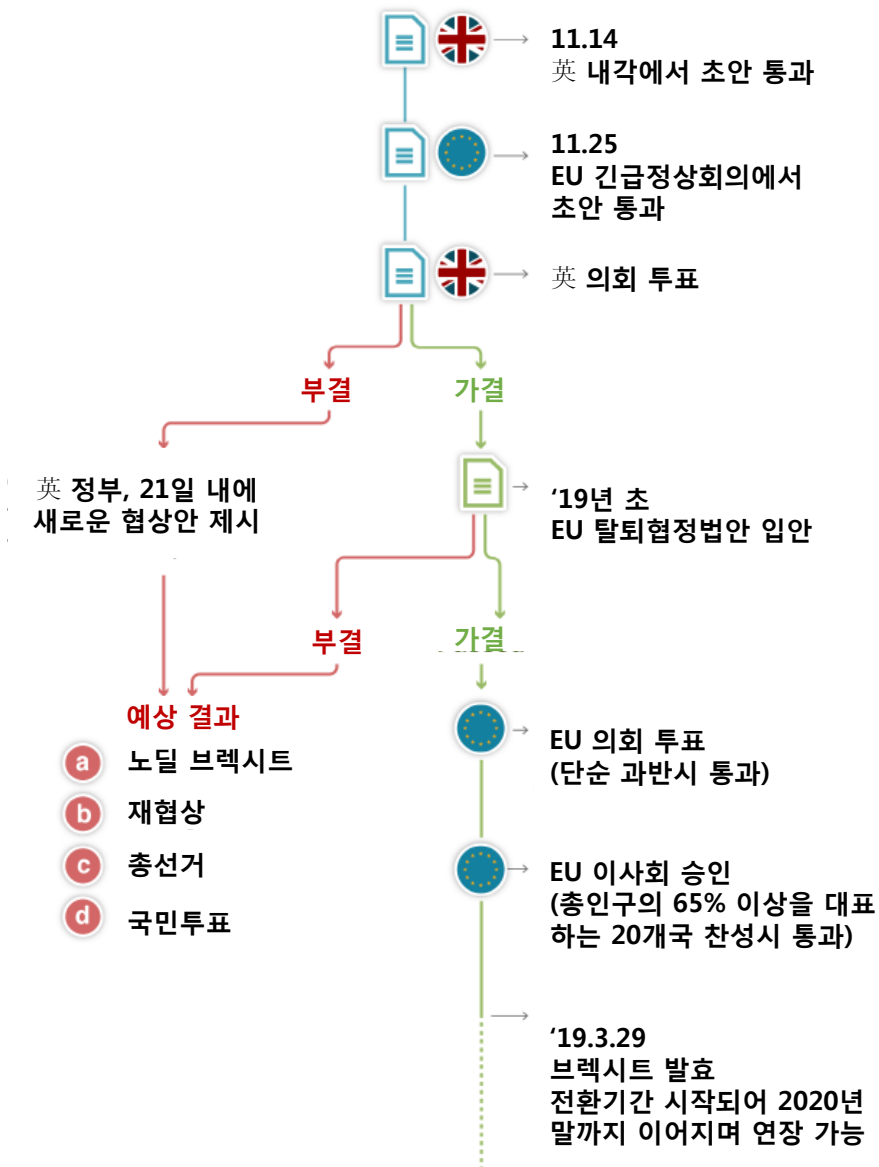
-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USMCA의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은 중간선거(11.6)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비준에 난항이 예상됨
 - USMCA에 규정한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 견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캐나다는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거대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와 중국은 2016년 FTA 예비교섭 개시에 합의하고 환경·노동 등의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 11월 양국간 FTA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 오브라도(Obrador) 멕시코 신임대통령은 4년 임기 중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중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 (미-EU, 미-일 무역협상)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이후 EU와 일본은 각각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초에 협상이 개시될 예정
 - 멕시코,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기간 중 자동차 232조 조치 면제에 합의하였고, EU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음
 - 미-일, 미-EU의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동 협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PTPP) CPTPP 회원국들은 CPTPP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회원국을 유치코자 하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건·절차 등에 대한 요건(guideline)은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임
 - 태국, 콜롬비아, 대만은 CPTPP 신규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필리핀, 영국 등이 가입을 검토중이며 한국은 CPTPP 가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 2019년에 신규회원국 대상 가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국들과 가입희망 국가들간 신규가입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
- (일본-EU EPA, 베트남-EU FTA) 일본-EU EPA는 내년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EU FTA는 2019년 말이나 2020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

- 일본-EU EPA가 발효되면 EU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며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 베트남-EU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규정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을 통한 EU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62류)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① 현 탈퇴협정 그대로 양측 의회 통과 ② 영국 의회 부결, 메이 총리 실각 및 재협상 ③ 2차 브렉시트 투표 ④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한국과 영국과의 통상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의회 통과) 현 탈퇴협정이 양측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국과 영국 간에는 기존 한-EU FTA가 전환기간 (2019.3.29~2020.12.31) 동안 적용
- (의회 부결, 실각 및 재협상) 영국 의회 부결시 메이 총리가 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총리가 EU와 재협상을 할 가능성 있음
 - 재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과 영국의 통상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차 브렉시트 투표) 親EU 의원들을 중심으로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에 잔류하게 된다면, 한국과 영국 간에는 기존 한-EU FTA가 변함없이 적용
- (노딜 브렉시트) 내년 3월 29일까지 탈퇴협정이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통상관계에 대한 합의 및 전환기간 적용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 2019년 3월 29일부터 한국과 영국 간 무역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으며 브렉시트 발효일 이후 한국과 영국 상호간에는 WTO에 통보된 MFN 관세율이 적용*
 - * 영국은 독자적인 상품 및 서비스 양허세율표가 없으며, 상품 관세율표 초안을 WTO에 제출(7.24) 하였으나 WTO 회원국의 이익제기로 현재 협상 중
 -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
 - * 우리 정부는 한-영 FTA 협상에 대비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한-영 FTA 공청회를 개최(2018.11.21)

<브렉시트 향후 전개 일정>



자료 : BBC

IV.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 개혁의 향방은?

1 2018년 동향

1. 분쟁 제소 증가와 상소기구의 무력화

□ 최근 WTO 분쟁해결 제소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임 상소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상소기구 무력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데 반해 상소기구의 상소리포트 회람 건수(3건) 및 비율(9%)은 평년(4.6건, 28.3%)보다 감소

<최근 5년간 WTO 분쟁해결절차 신청 및 상소리포트 회람 건수>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분쟁해결절차 신청 건수(A)	14	13	17	17	35	19.2
상소 리포트 회람 건수(B)	5	5	5	5	3	4.6
비율(A/B)	36%	38%	29%	29%	9%	28.3%

자료 : WTO disputes statistics(www.wto.org), 2018. 9. 28 기준

○ 상소기구 무력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이 규정된 상소위원 인원수(7명)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소위원 후임자 지명을 반대하기 때문임

-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불신을 표출하면서 후임 상소위원 지명을 반대하고 있음

· WTO 의사결정은 투표가 아니라 합의(consensus)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한 개 회원국이 반대해도 재임명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에서 4명¹⁾이 임기가 만료되어 3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그 중 다른 2명의 임기도 2019년 12월 만료 예정

· 사건당 상소위원 3명이 심리하기 때문에 현재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 최대 한 개에 불과하여 그 역할이 제한적

1) 리카르도 에르난데스(2017.6월, 멕시코), 김현중 現 통상교섭본부장(2017.8월, 한국), 피터 반 덴 보체(2017.12월, 벨기에), 스리바부 체키타난 세르반싱(2018.9월, 모리셔스공화국) 임기 종료

2. 개혁 논의 현황

□ 각 국은 WTO 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 등에서 WTO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

- (미·일·EU) 3국 통상장관 회의를 통해 보조금 및 국영기업 규정의 현실화, 디지털 트레이드 규범 제정 등에 대해 미·일·EU 3국 공동 협력체제 구축
- (EU) WTO 신규범 제정 필요성, 회원국의 통보 절차 및 투명성 강화, 상소 기구 개선 방안 등을 담은 『EU's proposals on WTO modernisation』을 발표
- (캐나다) 미·중을 제외한 12개 국가*들과 WTO 모니터링 기능 효율화,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규범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 및 협력 강화

* 한국, 호주, 브라질, 칠레, EU, 일본,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 우리나라는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아직 적극적인 의견 표명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WTO 개편 논의에서 분쟁해결제도, 의사결정 방식 개선 등 우리나라의 기존 주장이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금, 국영기업 문제가 포함되어 우려 상존
- 우리나라는 향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시급도가 높고, 회원국간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WTO 개혁 주요 이슈 >

- ① 무역관련 법규 통보 의무 강화 (역통보(Counter-notifications)* 허용, 기술 지원 등)
* WTO 회원국이 상대국의 무역 관련 법규 및 관행을 WTO에 통보
- ② 보조금, 과잉생산, 국영기업 규율 강화 (금지 보조금 범위에 과잉생산 유발 보조금 추가)
- ③ 분쟁해결 시스템 개편 (상소위원 증원, 임기 단임제, 상소보고서 기간 제한 완화)
- ④ 개도국 세분화 (개도국 졸업제도 도입, 예외 조치 기한 적용 등)
- ⑤ 디지털 무역, 서비스, 투자 등 신 통상규범 (외국인투자 차별 및 강제 기술이전 방지)

2 2019년 전망

- 2019년도 주요 WTO 개혁 논의는 ①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 강화, ② 상소기구 개편 방안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1. WTO 보조금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WTO 회원국은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모든 보조금을 WTO에 통보해야 하지만 현재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WTO 회원국의 보조금 통보율은 45%로 WTO가 창설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통보율을 보임

<WTO 회원국의 보조금 통보율²⁾>

	Percent share of total										
	1995	1998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Members that notified subsidies	50%	39%	44%	45%	47%	48%	48%	47%	47%	44%	35%
Members that made a "nil" notification	25%	16%	15%	14%	13%	11%	17%	20%	18%	15%	10%
Subtotal notifying Members	75%	55%	59%	59%	60%	59%	65%	67%	65%	59%	45%
Members that did not make any notification	25%	45%	41%	41%	40%	41%	35%	33%	35%	41%	55%

*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G/SCM/W/546/Rev.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25조 1~2항>

25.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조금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25.2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고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성이 있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통보한다.

- 통보 이행 의무 독려 방안으로는 인센티브 제공, 역통보 방식 허용, WTO 사무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2) G/SCM/W/546/Rev.9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모니터링 강화) 통보가 늦어질 경우 해당국은 합당한 사유를 밝히고 WTO 사무국도 통보된 사안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인력, 자본 등이 부족하여 WTO가 정한 통지 의무 기간을 충족할 수가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WTO 사무국이 기술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의 지원책을 시행
- (역통보 방식 도입) WTO의 他 회원국이 상대국을 대신하여 무역 관련 법규 및 관행을 WTO에 통보하는 방식

2. 상소기구 개편 방안

□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소위원 증원, 임기 단임제, 상소보고서 제출 기한(90일) 완화 등 상소기구 개편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상소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소기구 인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단임제로 변경 추진
 - 상소기구 위원 3명이 한 개의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상소기구 운영을 위해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 상소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초 임기(4년) 후 1회 재임명 가능 임기 규정을 8년 단임제로 변경 검토
- 그간 미국은 상소위원 보고서 제출 기한 90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편을 주장해 왔음
 - EU는 90일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상소기구와 회원국이 협의를 통해 검토 범위, 보고서 분량 등을 정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
 - WTO DSU 17조 5항 상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문구를 추가

<WTO DSU 17조 5항 Article 17 / Appellate Review>

5. As a general rule, the proceedings shall not exceed 60 days from the date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date the Appellate Body circulates its report.. ,...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V. 결론 및 향후 과제

-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에 따라 세계경제 및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 USMCA가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의 모델이 되고 미국 주도로 WTO 개혁 논의가 진행될 경우 향후 통상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
 - CPTPP, 일본-EU EPA가 발효되고 RCEP이 타결될 경우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합종연횡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 우리 기업들은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하고 단기 대응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단기 대응방안

- **(무역구제조치 수시 모니터링)** 수출 품목에 대한 전 세계 및 국별 무역구제조치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리스크 관리 및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
 - WTO 회원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통보하는 반기별 보고서(semi-annual report)를 참고하여 현재 수출대상국 및 관심국가들의 무역구제조치 대상 품목과 국가를 파악
 - 신규 시장 진출시 수출 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의 무역구제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규수출자로 진입시 이미 반덤핑을 부과 받고 있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 낮은 세율이 산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리스크 분담 계약체결)** 내년에도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관세부과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역계약 체결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노력
 - 이와 같은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장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의해 관세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자가 그대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철저한 바이어 관리)** 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바이어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입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시켜나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리스크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 반덤핑 제소를 당한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 평소 바이어와 구축한 신뢰와 품질력, 제품에 대한 충성도 덕분에 바이어가 반덤핑 대응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사례가 있음

중장기 전략

- **(미중 통상분쟁 리스크 관리)** 미중 갈등은 휴전을 거듭하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국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 시장 진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한국-중국간 연결공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의 對 중국 통상제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고려
 - 11월 29일 우리 정부는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를 개선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함
-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임
 - 현재 협상 중인 한-메르코수르 TA, 업그레이드 협상 중인 한-인도 CEPA, 추진을 검토하는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
 - 해외에 진출하여 제3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진출국가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대표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EU FTA가 발효될 경우 원산지규정을 활용하여 EU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외부 자문사, 로펌, 전문가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또는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마케팅, 영업, 재무분야 인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리스크 발생시 기업내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응해나가야 함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CEO 스스로 통상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종별 단체 및 무역지원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위기관리를 주도할 필요
- **(기업간 공조체제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 기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산업별 또는 이종간 통상대응을 위한 공조체제와 기업과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함
 - 통상이슈 대응을 통해 기업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업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주요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고 해결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와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양자간, 다자간 협의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나가야 함

부록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제현정/이희성/정혜선	18.02.22
2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필요성과 수출 유망품목	곽동철	18.03.08
3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쟁점	박진우	18.03.20
4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제현정	18.03.07
5	美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주요 영향	이희성/정혜선	18.03.09
6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이요셉	18.03.21
7	미국 반덤핑 조사 개시 동향 및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사례	이희성	18.03.20
8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박진우/최재원/제현정	18.03.23
9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박진우/제현정	18.04.05
10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	곽동철	18.04.16
11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	박진우	18.04.30
12	미국의 대(對)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이희성	18.05.08
13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정혜선	18.05.08
14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곽동철/최재원	18.05.09
15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개요 및 전망	이요셉/제현정	18.06.04
16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	박진우/곽동철	18.06.18
1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정혜선/박진우	18.07.03
18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설송이	18.07.10
19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통상규범의 필요성	곽동철/최재원	18.07.11
20	EU 셰이프가드 잠정조치 등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파급효과 -	제현정/정혜선	18.07.26
21	일-EU EPA가 우리의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곽동철/박진우	18.08.22
22	최근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	정혜선	18.09.13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23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설송이/제현정	18.10.04
24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제현정/설송이/곽동철	18.10.16
25	미·중 통상 분쟁 영향 및 시사점 - 통상 분쟁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	박진우	18.10.30
26	킵오프된 브렉시트 후반전 :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곽동철	18.10.31
27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제현정/설송이/박진우/ 이희성/곽동철	18.12.10

○ 상기 통상리포트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통상리포트 URL : <http://www.kita.net/newtri2/report>

○ 메일을 통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메일 : trifta@kita.net

KITA TRADE REPORT 2018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층
2018. 12. 10